화재 참변 장흥 세 모녀 '비극의 서울여행'

넉넉지 않은 살림에 두딸 소원 들어주려 첫 서울나들이
비용 아끼려고 저렴한 여관 투숙…네티즌 애도 잇따라
성매매 거절 당한 50대 男 홧김 여관 방화로 6명 숨져

지난 15일 장흥 집에서 여행에 나선 박모(여·34)씨와 두 딸(14·11세)은 들뜬 마음이었다. 15년 전 남편 이모(40)씨와 결혼식도 제대로 올리지 못한 채 가정을 꾸린 박씨에게 두 딸과의 여행은 언감생심이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데다 80대 시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처지였기 때문에 바깥나들이는 더 각별했다.

박씨는 올 겨울 방학에는 "서울에 꼭 가보고 싶다"는 중학생, 초등학생 두 딸의 소원을 이뤄 주려 어렵사리 여행을 계획했다. 넉넉지 않은 여행경비 때문에 저렴한 숙소에만 머물러야 해 딸들에게는 미안했지만 처음으로 엄마와 서울 구경에 나선 두 딸은 "괜찮다"며 행복한 표정이었다.

박씨의 남편은 동행하지 못했다. 힘든 목공 일로 가족 생계를 책임지던 남편은 애써 아쉬움을 감추고 딸들에게 용돈을 쥐어주며 "다음에 꼭 같이 가자"고 약속했다.

아빠와 딸들의 약속은 영영 지켜질 수 없게 됐다. 서울 여관에서 잠을 자던 세 모녀에게 화마(火魔)가 덮쳤다.

21일 장흥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장여관에서 벌어진 방화 사건으로 인해 박씨와 두 딸이 숨졌다.

이들은 지난 15일에 집을 나선 후 국내 다른 여행지를 둘러보고 19일 서울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상대적으로 숙박비(1일 1만5000원)가 저렴한 서울장여관을 숙소로 정해 서울 명소를 둘러보고 21일 장흥으로 내려올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여관에서 잠든 지 몇 시간 만인 20일 새벽 3시께 화재가 발생했다. 출동한 소방관 등이 1시간 만에 불을 잡았지만 박씨 모녀는 방 안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연기 때문에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천청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은 남편 이씨 등은 21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출석해 피해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순식간에 가족을 잃은 이씨는 침통한 표정으로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을 뒤로하고 경찰서를 떠났다.

장흥군 관계자는 "평소 박씨 가족은 넉넉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80대 시부모를 부양하며 사는 등 화목한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장흥군은 이씨에게 긴급 구호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에서도 이들 가족을 안타까워하는 추모 메시지가 이어졌다. 네이버 아이디 'sun7＊＊＊＊'는 "왜 꼭 죽어도 저런 가엾은 사람만 죽나. 하늘나라가 편해서 빨리 데려간 걸까?"라며 안타까워했다. 포털 다음에서도 사용자 '박주영'이 "하필 왜 그 여관에… 진짜 화가 납니다! 이 억울한 죽음을 어찌…"라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한편, 방화 용의자 유모(53·중식당 배달 직원)씨는 20일 새벽 여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여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여관에서 머물고 있던 숙박객 10명 중 박씨 모녀 등 6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유씨는 범행 뒤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법원은 유씨에 대해 현존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을 진행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21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의 한 인형뽑기 매장에서 청소년들이 기계를 조작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인형뽑기 게임진흥법 적용 반발 소송

법원 "사행성 논란…엄격한 규제 필요"

사업자들 행정소송 패소

놀이형 인형뽑기를 관광진흥법상 오락기기에서 배제하는 시행 규칙에 반발해 사업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최근 인형뽑기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유기(놀이·오락) 기구 지정배제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업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옛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상 놀이형 인형뽑기는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 기구에 포함됐었다.

그러나 문체부는 2016년 12월 말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 기구에서 인형뽑기를 제외했다.

이와 함께 인형뽑기 사업자들에게 2017년 12월 말까지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인형뽑기 기구를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한다고 했다.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제공업을 하려면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거지역 내에서는 영업할 수 없게 돼 있다.

재판부는 "인형뽑기로 청소년 등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해 규제 강화에 대한 여론이 조성됐다"면서 "원고들에게는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 시행 전에 1년여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허가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 거래소 전산장애로 피해 소송

법원 "증거 없다"…투자자들 패소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거래소 전산 장애로 가상화폐를 제때 매매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권모씨 등이 거래소 코빗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권씨는 작년 5월 가상화폐 이더리움 클래식 100여개를 샀다. 그는 이더리움 클래식 구매 당일에 개당 4만9900원에 팔아 이익을 얻고자 했으나, 거래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개당 2만420원에 팔게 되면서 31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코빗 측은 권씨가 매도 가격을 잘못 설정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일 뿐 전산 장애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코빗 이용자 이모씨가 낸 소송도 기각했다. 이씨는 2016년 5월 코빗 서버에 문제가 생겨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더리움 클래식이 사들여졌다면서 1300만원의 손해를 배상받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 코빗 측은 이씨가 매도·매수 시점과 가격 분석을 잘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맞섰고, 재판부 역시 손해가 생겼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술 취해…길가던 여성 돌로 내리쳐

광주남부경찰, 50대 붙잡아

술에 취한 남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50대 여성행인을 돌멩이로 내리쳤다. 이 남성은 주행중인 차량에 보도블록을 던지기도 했다.

21일 광주남부경찰은 돌멩이로 행인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특수상해 등)로 박모(51)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박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10분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한 은행 앞 길에서 A(여·55)씨의 머리를 지름 10㎝ 크기의 돌멩이로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자신을 체포하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보도블록(가로·세로 20㎝)을 운행 중이던 SUV 차량에 집어던져 차량 뒷좌석 문이 찌그러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머리를 꿰매는 등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여인숙과 달방에서 생활했으며 전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박씨가 A씨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술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눈이 마주친 이후 돌에 머리를 맞았다"는 피해자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말다툼끝 내연녀 숨지게 한 30대 조사

광양경찰은 21일 차량 안에서 내연 관계인 30대 여성을 마구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3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새벽 5시25분께 광양시 중마동 한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B(여·33)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때렸는데 죽은 것 같다"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차량 안 조수석에서 얼굴 등에 피를 흘리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경찰조사 결과 기혼인 A씨와 미혼인 B씨는 1년여간 교제를 이어왔으며, 최근 다툼이 자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는데 의식을 잃고 숨진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양=김대수기자 kds@

취업규칙에서 폐지된 수당 근로계약 남아있다면 지급

근로계약으로 보장했던 각종 수당을 더는 지급하지 않기로 취업규칙을 바꿨더라도 이에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는 수당을 그대로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이 더 우선하므로, 근로계약이 남아 있는 한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바뀐 취업규칙 내용은 효력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해양구조물 조립업체 G사가 재직 중인 근로자 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정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씨와 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수당을 어떻게 줄지가 정해져 있었다. 회사는 2016년 4월 자금 상황이 나빠지자 노사협의회를 통해 '기본급 외에 모든 약정수당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자구계획안을 의결하고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았다.

하지만 동의서를 내지 않은 정씨는 회사가 2016년 5월과 6월분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관급공사 계약 대가 돈 챙긴 50대 브로커 실형 선고

전남에서 자치단체 공무원과의 친분 등을 과시하며 관급공사 계약을 대가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50대 브로커가 실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김강산 판사)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3억 937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5년여동안 전남지역의 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48건의 사업을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계약을 해주겠다'며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 총 2억 69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재판부는 "자치단체 계약 절차의 공정성 등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고, 경쟁업체들이 관급계약을 수주할 기회마저 박탈되는 등 악영향을 끼친 점이 많아 실형을 선고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비슷한 내용의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손 작은 20대男, 지폐교환기 배출구에 손 넣어 돈 훔쳐

쌍나팔

○…일반 성인보다 작은 손을 가진 20대 남성이 '인형뽑기방'내 지폐교환기 배출구에 자신의 손을 넣는 수법으로 현금을 훔쳤다가 경찰 서행.

○…21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A(27)씨는 지난 18일 새벽 3시께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의 한 '인형뽑기방'에 들어가 지폐교환기의 지폐배출구에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연 뒤 보관돼 있던 8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갔다는 것.

○…무직으로 인근 '인형뽑기방' 일대에서 발생한 4건의 유사사건 용의자였던 A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남들보다 작은 손으로 공구없이 지폐교환기를 열 수 있었다"면서 "추가 범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4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7타경 53200	1	순천시 석현길70, 101동 13층 1302호 [석현동,향림현대아파트] 117.94㎡	아파트	113,000,000 113,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7타경 52887	1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6-5 192㎡	대	26,898,700 26,898,7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여수시 돌산읍 계동해안길 32-8 45.38㎡ 부속건물 창고22.5㎡[소재불명] 화장실4㎡[소재불명] 제시외 창고 등 16.7㎡	단독주택		
[대지/임야/전답]					
2017타경 3762	1	여수시 호명동 1557 710㎡	답	292,492,000 292,492,0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현황미준공건물건부지
		동소 1558-1 171㎡[물건번호1:토지만매각,건물매각제외2017.05.16.자㈜영토개발로부터공사대금금252,350,000원[이자별도]을위하여유치권신고있음]	답		
2017타경 4406	1	광양시 도이동 78-1 579㎡[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에저촉]	답	78,515,000 78,515,000	축사[8㎡]매각제외.수목매각포함
	4	광양시 광양읍 읍내리 313 238㎡	대	107,814,000 107,814,000	
2017타경 52085	3	고흥군 포두면 남성리 산262-7 13894㎡	임야	27,788,000 27,788,000	
2017타경 53323	1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503-4 401㎡[지적경계가불명확하므로경계측량요]	임야	25,664,000 25,664,000	현황전
	2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산62-1 4001㎡[배용환지분301/4001전부]	임야	10,261,000 10,261,000	일괄매각.지분매각
		동소 산62-4 800㎡[배용환지분30/800전부	임야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7타경 4406	5	광양시 중동 1302-8 254.4㎡	대	523,949,730 523,949,730	일괄매각
		광양시 동광길 27 1층점포151.32㎡ 2층사무실151.32㎡ 3층당구장151.32㎡ 4층주택146.01㎡ 지하실음식점197.12㎡	근린시설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②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각기일 : 2018. 2. 5.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8. 2. 12. [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08호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를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서 전자통신매체나 비치된 출력물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8. 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전계수